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2

– 경제상황 진단 및 과제 토론회 –

- 일시 : 2022년 4월 26일 (화) 15:0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공동주최　민주노총/지식인선언네트워크

소 개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 2

– 경제상황 진단 및 과제 토론회 –

사 회

- **전 종 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주제 발표

- **세계 경제상황 진단 : 김 정 호** (전 정책자문위원) / 5
- **국내 경제상황 진단 및 과제 :**
  김 성 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 19

지정 토론

- **임 수 강** (정책자문위원) / 37
- **이 진 숙** (인천본부 정책국장) / 45
- **고 미 경** (민주노총 기획실장) / 53

주제발표 01

세계 경제상황 진단

김 정 호

전 정책자문위원

1. 후기 국독자[1] 체제붕괴 지표— 스태그플레이션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1929년 대공항 당시와 그 발현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가 경제생활에 적극 개입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 때문에 비록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과 기업 파산이 줄을 이을 지라도, 그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개인들에게 있었으며 국가가 많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었다. 이리하여 정부 재정은 아껴졌으며 빚더미에 앉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2차 대전 이후 '복지국가' 관념이 보편화되었으며, 정부는 경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대중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복지국가 덕택에 자체 많은 체제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그 '합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합법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선 경제위기 기간에도 자본주의 국가들은 최대한 적자 재정을 펼쳐서라도 경제안정의 조속한 회복과 대중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

자본주의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화폐와 재정 정책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무작정 화폐를 찍어 내거나 적자 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인데, 과연 국가의 개입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약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위기의 징표를 찾는다면, 아마도 이 같은 국가 개입 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선 국가가 돈을 푸는 정책이 유효한 한, 경제위기는 비록 국부적 혼란을 가져올망정 결코 체제 전반을 위기에 빠트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그동안 몇 차례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대대적인 '양화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세계경제는 체제위기로까지 가지 않고도 나름대로 경제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체제붕괴는 세계적 차원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발함으로써 더 이상 각국의 양화정책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때라야** 비로소 찾아온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악성 인플레이션이 한 번 출현하면, 그 순간부터는 금융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정부의 일체의 개입은 무력화 하게 되기 때문이다. 돈이 풀리면 그것은 곧바로 물가인상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촉발시킨다. 자본가들은 다시 그 비용을 제품가격에 전가시킴으로써 물가가 인상하게 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후술함)

---

1) 1970년대 이후 현대자본주의는 매우 심각한 변동을 겪었다.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브레튼우즈체제의 해체와 함께, 자본축적에 있어서도 일국적 중심이 아닌 **국제적 차원의 자본축적운동을 본격화**한 점에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2차 대전 후 케인스주의로 상징되는 고전적인 국가독점자본주의 한 시대를 마감 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를 '**후기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부르면서 기왕의 국가독점자본주의 (케인스주의 하의 **전기** 국가독점자본주의)와 구분하고자 한다.
왜 '**국제**독점자본주의'라 부르지 않고, 여전히 '국가독점자본주의' 내에서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현 국제독점자본(다국적기업)은 한편에선 전 지구시장에서 활동하는 '보편적 자본'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선 공간적 차원에서만 지구적일뿐 그 뿌리를 여전히 특정 국가에 둘 수밖에 없는 '특수적 자본'(즉 민족적 자본)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때문이다. 둘째, 현 국제독점자본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반영해줄 상부구조 즉 진정한 '**자본주의 세계정부**'를 아직까지 성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은 현 단계 국제독점자본 발전의 미성숙성을 반영한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는 비록 지구적 단일시장이 초보적으로는 성립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하기 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요한다는 객관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2020년 초부터 본격화한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악성 인플레이션이 나타날지 여부는 그간 이론계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미 한 차례 내상을 입은 신자유주의체제가 마침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로 몰릴 것인지는 순전히 이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1970년대와 같은 악성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출현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현존 신자유주의체제의 정식 붕괴 징표로 삼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그 후과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역사적으로 보자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자본주의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케인스주의가 막을 내리고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이 발생했다. 그 같은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도래하면** 자본주의는 자신의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함으로써만 새로운 축적 모멘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 그것은 오랫동안 익숙한 경제 시스템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이기에 상당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케인스주의를 대신하여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1980년대라는 과도기를 거쳤으며, 19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축적양식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도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지금은 **지구화시대**에 진입함으로써 이미 전 세계적인 단일시장이 구축되었으며, 경제일체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패러다임을 자본주의가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이론계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작금의 인플레이션이 과연 1970년대와 같은 상당 기간 지속성을 갖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할지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선 치명적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최근 스태그플레이션의 배경

지금 시기 스태그플레이션의 출현은 유일 패권국가 미국으로선 자신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제공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소진했음을 뜻한다. 이에 대해 잠시 설명하기로 하자.

미국은 그간 세계경제를 '소비중심'과 '공급중심'으로 **이원화**한 구조를 만들었으며, 그중 자신은 달러패권을 이용하여 소비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세계경제에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지구적 차원에서 '소비중심'과 '제조중심'이 분리되는 경제구조의 이원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세계경제의 이원구조에 있어 미국은 '소비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도맡았으며, 주로 아시아로부터의 대량 수입을 통해 거액의 무역적자를 누적하는 대신 세계의 소비와 성장을 일정 추동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과 일본, 독일, 한국은 '제조중심'의 역할을 도맡아 대미수출을 통한 거액의 무역흑자를 획득하였다. 이 같은 이원구조는 지구화시대 세계경제 초기에 도달한 일종의 '균형' 형식으로서, 현대제국주의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 '소비중심'의 역할을 하게 된 기원을 따지자면 1970년대 중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종전 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줄곧 경상수지 흑자국가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서구 7개국 흑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 처음부터 세계 '소비중심'의 역할을 도맡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이 같은 흑자폭이 줄어들더니 1976년에는 마침내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이후 그 적자폭은 날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 들어 레이건 정부 시대에는 이미 무역적자 규모가 당시로선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 '쌍둥이 적자' 현상이 중요한 국제문제로 등장하였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이후 노(**老**)부시와 클린턴 정부 시대엔 약간 수그러들긴 하였지만 지속되었으며, 특히 2001년 조지워커 부시 정부 이후에는 다시 급격히 확대되어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직전엔 그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표 1 참조). 이리하여 미국은 1970년대 중반의 '일반적인' 무역적자 국가에서, 1980년대 이후에는 점차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 국가로의 질적인 전환을 이루면서 '세계의 소비중심'이 되었다.

<표 1.1> 1990년도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단위: 10억 달러)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상수지	-79	3	-52	-85	-122	-114	-125	-141	-215	-296	-411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상수지	-395	-458	-521	-634	-745	-807	-719	-691	-384	-442

자료 : IMF. KOSIS에서 획득한 자료에 기초해 필자가 정리.

이처럼 미국이 세계의 '소비중심'이 되고 다른 지구상의 몇몇 국가들이 '제조중심'이 되는 것은, 2000년대 조지워커 부시 정권과 함께 나타났던 잠시의 우연적 현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물이 그러하듯 일정 기간 지속되는 현상의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내적 요인과 일정한 기제가 존재한다. 이 같은 세계경제의 이원화 현상에도 마찬가지로 이를 필연적이게 하는 내적 요인과 기제가 존재하였는데, 그 핵심은 미국의 **달러패권**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 기술적인 운행 기제가 작동하였다.

(1) 세계화폐(달러)의 발권력을 가진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폐 달러'를 수출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실질 자원'(즉 일반상품)을 수출함으로써 미국 국내소비자를 만족시켜주는 대가로 세계화폐(달러)를 획득한다.

(2) 미국의 무역상대국이 무역흑자로 획득한 달러는 미국 정부국채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게끔 유도됨으로써, 미국은 자신의 경상계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융자를 받게 된다. 이로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는 동시에, 달러 환율의 안정화와 미국 국내 이자율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 미국은 무역적자를 통해 외채를 누적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 계속해서 대외 자본수출을 수행한다. 여기서 대미 흑자국가가 누적하는 미국의 외채는 '달러'나 '미국국채'와 같은 무이자 혹은 저이자 형식의 부채를 위주로 하는 반면에, 미국의 자본수출은 해외 직접투자와 같은 고수익 자산을 위주로 한다. 이 경우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지불액이 미국이 해외에서 수행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의 이윤과 이자소득을 합한 것보다 적기만 하면, 미국은 이상의 정부채권을 통한 외국의 무역흑자를 흡수하는 방식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기제의 작동으로 그동안 미국이 아무리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남발하더라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이 값싸고 저렴한 상품을 제공해 줌으로써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비정상적 균형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으며,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가 일차 드러났다.

하지만 미국은 당시에는 달러를 살포하는 '양화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서도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위의 세계경제의 '이중구조'가 기본적으로는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첫째,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살포된 돈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이미 과잉인 상태에서, 또 다시 그 때보다도 더 큰 규모의 양화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당시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국들은 앞 다투어 소위 '양화정책(quantitative easing)'을 펼치면서 마구 돈을 찍어 냈다. 금융위기가 본격화했던 2009년 이후 세계 연평균 GDP성장률은 3%이었던 반면, 통화증가량은 12%로 전자의 4배에 달했던 것만 보아도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과잉 유동성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미국은 2015년부터 '금리인상' 모드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코로나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소비수요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과잉생산의 무거운 짐이 세계경제를 짓누르는 '저성장' 상태를 지속하였다. 그 때문에 금융위기 발생 전의 수준으로 시중 금리를 원상 복귀시키려는 작업은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부진하였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코로나사태로 인해 새로운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리하여 겨우 금리를 2%대 인상한 상황에서 다시 '제로 금리' 상태로 되돌아갔다. 각국은 이번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확대된 양화정책을 펼쳤다. 심지어 미 연준은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매달 1200억 달러의 기업어음과 채권을 사들이는 팽창정책을 2년째 이어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재정부채 규모 역시 더욱 크게 불어났는데, 코로나사태 전의 106%에서 지금은 이미 133%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은 모두 실물 자산이 뒷받침 되지 않은 순수한 화폐 증가분이다. 이 때문에 그들 중 많은 부분은 투기자본으로 전환되어 주식시장, 부동산, 에너지·원료·식량 등 대종 상품 시장에 들어가 인위적인 **가수요**를 일으켰다.

둘째,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총수요가 증가한데 반해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공급부문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오히려 축소되었다. 각국에서 생산 중단 사태가 발생하거나, 콘테이너가 부족하고 항구 적체 등으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격차는 더욱 확대 되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추진하는 '신냉전'과 '탈동조화' 정책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공급망을 더욱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더욱 결정적인 것은, 그동안 세계의 제조공장 역할을 해 오던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이탈하기로 결심**한 점이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자국의 안정적 경제발전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

존의 수출위주 성장 정책에서 내수 위주의 정책으로 전략을 크게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소비중심-공급중심' 이원화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분명히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이번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안화 강세**'가 두르러진 점이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위안화는 1달러=7원 대에서 거래 되었다. 지금 환율은 대략 1달러=6.3원 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자국 시장의 확대를 중시하는 성장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기존처럼 값싸고 저렴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에 의존하였더라면, 그것들을 해외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를 위해선 자국 상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양화정책으로 이미 실질 가치가 저하된 달러에 대해서조차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감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한 만큼 – 이 점은 트럼프 정부 때 중미 간 전면적 무역전쟁을 겪으면서 분명해졌다 – 중국은 미국의 '양화정책'에 맞선 '위안화 절상'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미국 소비자들로선 이 때문에 과거와 달리 가격이 적지 않게 인상된 중국 상품을 대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점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소비자에게 가격인상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당 정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필요한 일상 생활용품을 여전히 중국산 제품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상 세 가지 요인 즉 **과잉 유동성, 공급망의 교란, 중국 성장전략의 변화**는 최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요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요인들은 코로나사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구조적인 성격을 갖는다. 과잉 유동성이나 중국 성장전략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한다면 미국의 '탈동조화' 전략은 실제 실현 상의 곤란 때문에 중간에 수정될 수 있거나 좀 더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장기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스태그플레이션은 왜 치명적인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몰고 오게 될 **스태그플레이션** 즉 악성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에 있어선 왜 치명적일까? 그것은 자본주의경제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교환체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다름 아닌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이 극단적으로 파괴된 상태를 말한다. 그동안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은폐되어 왔던 '과잉생산' 모순은 스태그플레이션 이란 형식으로 마침내 폭발하여 표면에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겉으로는 초과 수요로 인해 슈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본질이 '공급부족'이 아닌 '과잉생산' 이란 말일까? 그리고 왜 이 같은 극단적인 불균형은 발생할까? 이 점을 해명하는 것이 우선 스태그플레이션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먼저, 슈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하는 공급 측 사정을 보면,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말미암아 이자 비용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도태되지 않은 채 크게 늘어난데 원인이 있다.

앞에서 2009년 이후 세계 연평균 GDP성장률의 4배에 달하는 통화증가량이 발생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렇듯 많이 풀려나간 돈은 기업의 차입경영을 부추겼으며, 그에 따라 기업부채 증가율은 260%로 상승하여 같은 기간 GDP 증가율인 40%를 훨씬 앞질렀다.[2] 이는 그 동안 세계경제가 빚더미 위에서 비정상적인 확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3] 이렇듯 많이 풀린 돈 때문에 기업은 돈을 빌리기가 쉬웠으며, 부채에 의존한 과잉투자를 통해서 세계 경제는 일정 기간 명목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4]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 대출인 '레버리지론'이 급증하였다. 레버리지론은 부채가 많거나 투기 등급 이하의 기업에 높은 금리를 받고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부채의 급증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신흥국에서도 공통된 현상이었는데,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 레버리지론 규모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2007년과 비교해 두 배가량이나 늘어난 1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인 대출채권담보부채권(CLO)도 전세계적으로 7500억 달러를 넘어서[5] 자칫 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재현될 우려마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풍부한 자금 공급 덕택으로 간신히 이자만 지급할 수 있거나 그것도 힘겨운 '한계기업'들이 대량으로 생겨났다. 코로나사태 초기인 2020년 초 미국은 회사채 등급이 투기등급 직전인 BBB 기업들이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보도가 있었다.[6] (이 점은 한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 기업들은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곧바로 '정크펀드'로 전락하여 기관투자가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이들 **한계기업은 '자본과잉'의 실존형태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한정된 자원(원료, 자본, 토지, 노동력)의 가격을 끌어 올려서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제품 가

2) "부풀어 오른 부채 타격하는 코로나", 한겨레신문, 2020년4월13일.

3) 이에 대한 경고는 이미 일찍부터 나왔다. 다음 기사를 보자. "한국은행은 7일 '미국 기업 고위험 부채 현황 및 평가'에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 가계부채는 감소하는 반면 기업부문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말 현재 미국의 고위험 부채가 2조4천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5.1% 증가했다." (한은 "미국 기업 고위험 부채, 금융위기 대비 2배 이상 늘어", 연합인포맥스, 2019년4월7일)

4)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은, "기업부채의 급증은 여유자금이 풍부한 금융회사들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부문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상당부분이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금리 기조…금융회사 '부실기업' 대출 증가", 경향신문, 2019년10월20일) 4.27시대연구원의 손정목씨는 그의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해결책으로 실시한 양적완화는 은행, 펀드등 금융기업들이 보유한 부실화된 모기지 채권과 이로 인해 신용이 불안한 국채 등을 담보로 미국이 먼저하고 뒤이어 유럽·일본이 최근까지 13조5천억달러(약1경6천조원) 이상을 인쇄해 시장에 주입한 구제금융이다. 그 결과 소수의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당시 부실화되었던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은 받은 양적완화 자금을 생산적 투자보다 단기차익이 가능한 주식과 채권에 넣어 더 큰 부를 쌓았다. 증시는 고공행진 하였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못했다. 그들은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를 믿음으로 더욱 더 투기적 파생상품 시장을 키웠고, 이제 그 규모는 세계총부채(255조 달러. 약30경6천조원)의 6배 가까운 1천5백조달러 이상(누구도 이 규모를 정확히 모른다)으로 추정된다." (손정목, "코로나19의 정치경제학(2)", 민플러스)

5) ("저금리 기조…금융회사 '부실 기업' 대출 증가", 경향신문,2019년10월20일) 이 기사는 특히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즉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신규로 레버리지론을 이용하는 기업 중에서 투자부적격 수준인 '신용등급 B' 이하 비중이 2007년 65%에서 2018년 75%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86%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레버리지론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인수·합병 등에 쓰고 있다는 점도 연쇄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위 기사.

6) "금융위기 이후 BBB 회사채 비중은 연간 평균 38.9%에서 44.6%로, 지난해에만 51%(3조8000억달러)로 불어났다."("글로벌 회사채 부실, 경기침체 뇌관", 국민일보, 2020년3월20일)

격을 상승 시킨다.

여기에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불어난 유동성이 대량으로 가세함으로써 이들 자원에 대한 **'가수요'(생산측면의)**를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이번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보면, 코로나사태로 인해 경기가 아직 채 살아나기도 전인 2020년 하반기부터, 미리 경기회복을 예상한 투기자본이 대거 유입함으로써 에너지와 원자재에 대한 선물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러한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한편 수요측면에서 보면, 일반 서민대중의 수입은 그간 별로 증가한 것이 없다. 오히려 코로나사태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사람들이 더 늘었다. 이런 와중에 상품가격의 인상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키며, '유효수요'는 전체적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듯 수요와 공급이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됨에 따라 전체 수급 균형이 깨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금년 2월 중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미 7%대로 진입하였다. 이리하여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물가'가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출현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의 본질은 '공급부족'이 아닌 '과잉생산'**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한계기업과 과잉 유동성으로 현상되는, 자본과잉에 따른 과잉생산인 것이다.

이 같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이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양자의 균열과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다. 물가 인상이 다시 물가인상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함에 따라 전체 경제기초를 뒤흔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그 과정은 이러하다. 물가의 전반적 인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이 '계기'가 된다. 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소득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게 되지만, 그 대신 한계기업들(자본과잉)로선 원자재 가격이 이미 전반적으로 인상된 상황에서 임금비용 마저 상승하게 되면 이윤율이 더욱 저하되어 경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임금인상 분을 제품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게 된다.

'잉여가치론'에 입각해서 이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자. 원재료 등은 불변자변(C)이기 때문에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의 가격변동은 그대로 상품가격에 반영된다. 그 때문에 비싸진 상품 단가 때문에 명목 상 매출액은 오를 지라도 이윤은 그대로이다. 다른 한편 전체적으로는 C의 증가로 인해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의 상승 때문에 이윤율은 하락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제품가격 상승에 따른 유효수요의 위축, 그리고 이에 따라 매출이 위축된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 이 부분까지 고려하게 되면 자본의 실질 이윤율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가변자본 V (임금) 마저 오르게 되면 이제 자본 입장에서는 잉여가치(부불 노동시간)가 직접적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윤율 저하는 더욱 심각해진다.

요즘 식당가계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식재료 가격의 전반적 인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출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음식 값을 올리는 사례를 종종 목격한다. 그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현실 사례의 하나이다. 이리하여 물가는 다시 올라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은 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악순환이 되풀이되다 보면 악성 인플레이션은 상시화 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고착 된다.

정부로서는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같은 악성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후 설명을 하겠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도 관련이 있다.)

첫째,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할수록 화폐 가치는 끝없이 추락한다. 이 때문에 모든 상품의 안정된 교환비율을 획득할 수 없게 되어 시장경제 전반의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끝없이 평가절하 하는 화폐보다는 실물자산 보유를 선호하게 되며, 이는 다시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추진력이 된다.

둘째, 악성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결코 골고루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이해득실은 집단마다 '불균등' 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대신에, 이 같은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문제는 일부 소수 자산가들을 제외하고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빈부격차가 단기간에 격심하게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상실감'이 확대된다. (중산층의 대거 몰락)

실제 이번 코로나사태와 인플레이션의 진행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빈부격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리하여 이 같은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없고 '고물가'를 따라 갈 수 없는 계층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는 '유효수요'를 더 한층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잖아도 심각한 수요 공급의 모순은 이로 인해 한 단계 격화되는 것이다.

셋째, 사회 불만은 이제 위험스러울 정도로 팽창하여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서 각 정치세력은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이러한 불만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바이든 정부는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악성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어떻게든 손을 써야 한다.

4. 미국 패권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이렇듯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될 경우 패권국가 미국의 지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은 달러라는 국제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등 화폐·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크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맞더라도 미국은 가장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또 미국이 일단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게 되면, 현재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세계 자본주의 역시도 조만간 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 패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세계 경제위기와 관련한 전망에 있어서도 매우 관건적이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 장기화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미국 패권의 핵심 기초인 달러 가치를 하락시켜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흔들리게 만든다. 이에 대해 잠깐 설명하도록 하자.

국제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선 최소한 다음 두 가지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하나는 보편적 교

환과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가치보존 수단으로의 기능이다. 미국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특히 후자, 즉 **가치보존 수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지금처럼 물가인상이 8%에 도달할 경우를 보자. 기준금리가 아직까지 거의 '제로'이고[7] 시중금리가 2%대에 불과한 상태에서, 달러 보유자는 그냥 앉아서 6%의 손실을 입게 된다. 즉 물가인상은 고스란히 달러 보유자의 화폐가치 하락의 손실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물론 이 같은 손실분은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하나는 다른 나라들도 보편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타국 화폐를 보유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의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물론 각국마다 인플레이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달러를 보유한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하나는 달러가 '안전자산'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기축통화인 달러의 보편적 교환과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관련되며, 특히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보통의 경우 이 두 가지 사정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감내하고서라도 달러 보유를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문에 설령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달러는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달러와 경쟁할 만한 다른 경쟁자가 없는 조건에서만 유효하다. 지금은 중국 위안화의 존재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뒤집혀 질 수 있다.

첫째, 중국 위안화는 국제기축통화로서 지녀야할 보편적 교환과 지불수단의 기능을 상당정도 갖추고 있다. 위안화는 2015년 IMF 특별인출권(SDR) 준비통화에 정식 편입되어 세계 '5대 기축통화'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중국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1위이며,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고 있고, 누구나 인정하듯 제일의 제조 강국이다. 그런 만큼 자국화폐의 국제적 교환과 지불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물경제 능력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국제결제시스템(SWIFT)에서 부분적으로 축출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 사실이다. 이는 국제기축통화가 갖추어야 할 교환과 지불수단의 기능이 앞서 언급한 외환 보유고나 상품 공급 능력 외에도, 그 나라가 독자적인 국제결제시스템(SWIFT)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도 중국은 자체 결제시스템(CIPS)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만일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위안화는 교환과 지불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최근 인민은행이 국제결제시스템(SWIFT)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자체 '전자화폐'를 보급하고 있기에, 앞으로 이 부분의 기능은 더욱 보강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위안화의 가치보존 기능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점 역시도 최근 각국 중앙은행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물가인상률이 아직까지 1~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2022년 3월 9일 중국 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월보다 0.9% 올라 상승률이 2개월 연속 1%를 밑 돌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2.3%까지 오른 뒤 12월(1.5%), 올해 1월(0.9%)에 이어 3개월째 둔화세를 지속했다. 4월 11일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CPI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로 다소 상승했다. 하지만 다른 주요 국가들의 이 지수가 이미 7%~8%대에 접어든 것에 비한다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7) 미 연준이 2022년 3월 16일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해서 '제로 금리' 시대를 정식 마감했다.

위안화는 이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최근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위안화는 지난 2020년 무역 전쟁이 한창일 무렵 1달러=7위안 대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1달러=6.3위안대로 10% 가량 절상되었다.[8)]

거기에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넘기기 위해 '제로' 금리를 실시했던데 반해, 중국은 기준금리를 평균 2%대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물가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는 상태이다 (표2 참조). 이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위안화를 보유할 경우 가치보존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표 1.2> 중국의 예금 금리

(단위: %)

예금 금리	2015년8월26일	2015년10월24일
1년	1.75	1.5
2년	2.35	2.1
3년	3	2.75

자료: https://bank.cngold.org/c/2022-03-23/c8020845.html

중국이 이처럼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자국화폐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은, 코로나사태를 맞이하여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양화정책'을 쓰지 않은 채 정상적인 경제운영을 해온 덕분이다. 중국은 그간 몇 차례 시중은행의 지불준비금을 낮추고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대출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표3 참조). 이는 중국이 코로나 방역정책에 있어 성공을 거둠으로써 생산과 유통 등 경제활동을 조기에 정상화 시킬 수 있었으며, 진작부터 추진해온 내수 위주 성장정책이 효과를 보아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인데 기인한다.

<표 1.3> 중국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변화

(단위: %)

	기존	2020.4.	2021.12	2022.1
대출금리	4.05	3.85	3.8	3.7
비고		0.2% 인하	0.05% 인하	0.1% 인하

자료: 한겨레신문, 2022.1.20. 보도에 기초해 작성.

이처럼 국제통화체계에 있어 교환과 지불수단 기능, 그리고 '가치보존' 수단으로서의 기능까지 모두 갖추게 된 위안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자국 내 악성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할 경우 현재 달러가 국제기축통화로서 차지하고 있는 상당 몫을 위안화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세계는 **유로화를 포함한 '삼분천하'**의 국면을 맞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국제통화 다원화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와 함께 미국 패권의 종식을 뜻한다.

8) 인민은행은 2000년5월29일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05% 오른 7.1316위안으로 고시했다.

5.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관계

따라서 이상과 같은 결과를 막고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국으로선 반드시 자국 내 스태그플레이션이 고착화 하는 상황을 막아야만 한다. 그 방법은 다음 두 가지밖에는 없다.

하나는 가파른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길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근저에는 수요와 공급 균형의 심각한 파괴가 있는데, 앞서도 언급했듯 그 본질은 **과잉생산**이다. 따라서 파괴된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선 과잉생산의 주범인 '한계기업'을 과감히 도태시켜 한정된 자원 (원료, 자본, 토지, 노동력)에 대한 초과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선 금리인상이 효과적이며 또한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요구되는 폭은 정상적인 경우 최소한 물가인상을 상쇄할 수 있는 만큼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아직까지 거의 '제로 금리'인 상황에서 물가는 이미 7%~8%대로 진입하였다. 만약 이 차이를 한꺼번에 메꾸려 한다면, 지금처럼 대량의 한계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마도 대규모 부도사태와 함께, 이로 인한 은행 부실화와 주식시장의 공황 심리를 자극해 금융체계 전반의 마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또 다른 경제위기를 조성한다. 따라서 설령 한꺼번에 7%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최소 3~4%대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져야만 지금의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9] 하지만 이 역시 지금처럼 여전히 경제체질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국 정책당국자들로선 쉽게 결심하기가 어렵다.

다른 하나는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나 전쟁 등 큰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각국 투자자들은 안전한 대피처로서 달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경제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미국은 시종일관 그것을 적극 추동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련 해체 후 이미 5차례 동진을 통해 나토를 확장하였으며, 이리하여 미국과 서구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와 벨루시아(백러시아)까지 진출하여 러시아의 전략적 공간을 크게 위축시켜 놓았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최근 벨루시아까지 세력권으로 넣기 위한 정변을 기도하다가 실패한 바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은 러시아가 제기한 '우크라이나 중립화'라는 최후 요구를 거부한 채,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부추겨서 '민스크 협정'을 파괴하고 돈바스 지역 일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토록 사주하였다. 이 같은 미국의 행위는 러시아와의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협정을 무산시키고, 자꾸 이완돼 가는 서구 동맹국들을 나토라는 군사적 동맹체제로 다시 결속시키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는, 자국 내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달러체제를 구제해 보려는 심산이 작용하고 있다.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국지전을 발발케 함으로써 투자가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발동시켜 달러의 지위를 보존하려는 것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다음 세 가지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9) " '금리 올해 3% 이상 높여야'…매파 발언 세지는 연준" (한국경제TV, 2022.3.1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215&aid=0001020676 .

첫째, 각국으로 하여금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를 부추겨 '달러 강세'를 실현시킴으로써 국내의 물가인상 압력을 낮추려는 것이다. 국내 물가를 인상시키는 주요인인 유가와 원자재 등 대종 상품 가격은 국제 무역거래에서 대부분 '달러'로 표시되고 결제된다. 그 때문에 만약 달러가 강세를 실현한다면, 상대적으로 이들 대종 상품 가격은 하락하여 미국 내 물가 인상 압력을 낮출 수 있다. 이것은 물가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기도 하다.

둘째, 안전한 도피처를 찾아 국내에 유입되는 해외 달러를 이용해서, 미 연준은 유동성의 추가 확대 없이도 이 같은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5G, 친환경자동차, 반도체,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경제 부흥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위한 막대한 소요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외로부터 새로 유입된 자금들은 미국의 국채시장, 주식시장 등에 투자될 것이며, 이렇게 하여 새로운 산업들을 부흥시킴으로써 지난 1990년대 'IT호황'을 이끌고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성공적인 경험을 재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이를 통해 한계기업을 퇴출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미 연준이 안정적으로 단계적 금리인상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서도 이번 스태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인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부분적으로 달러 강세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가가 1배럴 당 120달러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 말해주듯,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농산물 가격을 크게 올리고 국제 공급망을 더욱 교란시켜, 당장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달러 강세'는 다른 화폐와의 상대적 대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와 상품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금의 '고유가'(고물가) 현상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둘째, 달러 강세와 함께 위안화 강세가 함께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안화는 1달러=7.0원대에서 현재 1달러=6.3원대까지 상승한 상태이다. 이는 계속 달러가 위안화의 견제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달러가 결코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달러 패권의 종식은 피할 수가 없게 된다.[10)]

10) 최근 이와 관련한 몇 개의 뉴스가 전해졌다. 하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과 사우디 정부가 석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 문제를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는 기사이다 (2022.3.15.자). 소식통들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선물거래에도 위안화 가격 표시제인 '페트로 위안'을 적용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에 미보다 더 '큰손' 된 중국…달러패권 도전 '위안화 결제' 논의", 한겨레신문, 2022.3.16.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35042.html)
또 다른 소식은 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의 보도에 기초한 것인데, 러시아와 중국이 단일 화폐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세계가 놀랄 소식 떴다… 러시아-중국, 급기야 단일 화폐 추진한다", 위키트리, 2022.3.18 https://m.oheadline.com/articles/W83CeBepUp0y_uDIUz4fKA==?uid=cgaCGfP-Qda90Z5JwN8chE) 이 두 기사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좀 더 상세한 해설 기사가 하나 더 있다.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중국이 달러 거래를 우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 및 통화시스템을 위한 메커니즘을 설계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금과 중국 페트로위안에 인사를 보낸다", 통일시대, 2022.3.18.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

주제발표 02

국내 경제상황 진단 및 과제

김 성 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국내 경제 진단과 전망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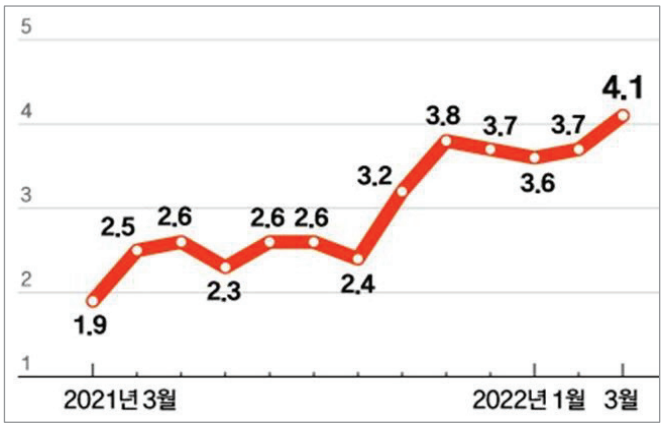
1. 한국 경기둔화로 전환
2. 위기를 키우는 보수정권
3. 수출경제, 부채경제의 한계
4. 진보진영의 과제

한국 경기둔화로 전환

-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 원화가치 하락
- 무역수지 적자
- 지정학적 리스크
- 생산활동 및 고용 동향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 코로나 시기 과잉 유동성 공급, 세계적 인플레이션 초래.
- 부동산, 주식시장 거품 형성
- 인플레이션 + 글로벌 공급망 차질 + 우크라이나 전쟁
-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 4.1%로 10년 3개월만에 최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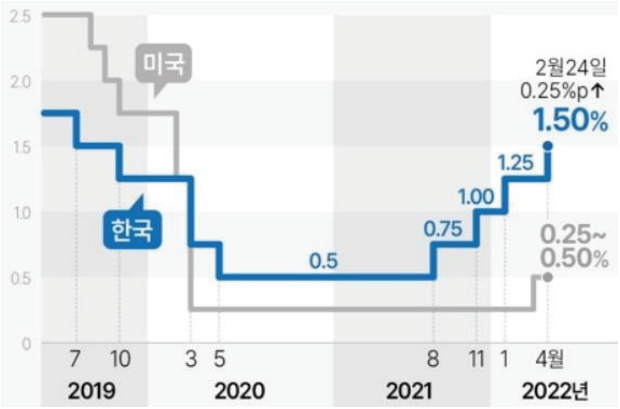
* 한국은 CPI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아 미국, 유로존 보다 물가상승률이 낮게 표시됨

자료 : 통계청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 세계경제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미국 연준이 빠르게 긴축(테이퍼링, 금리인상, 양적긴축)에 돌입하자, 한국은 선제적으로 금리인상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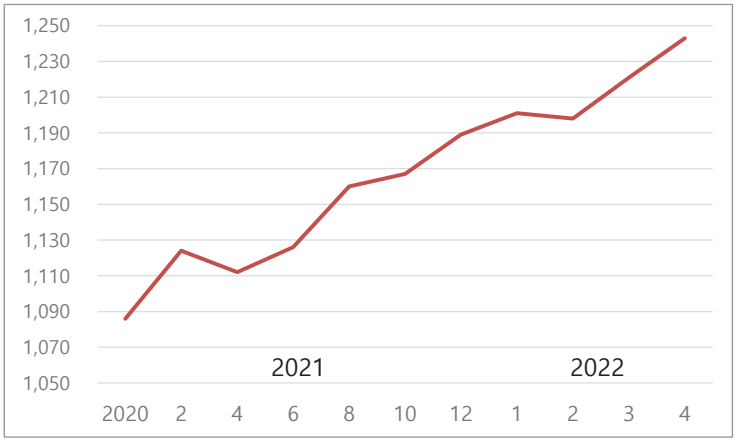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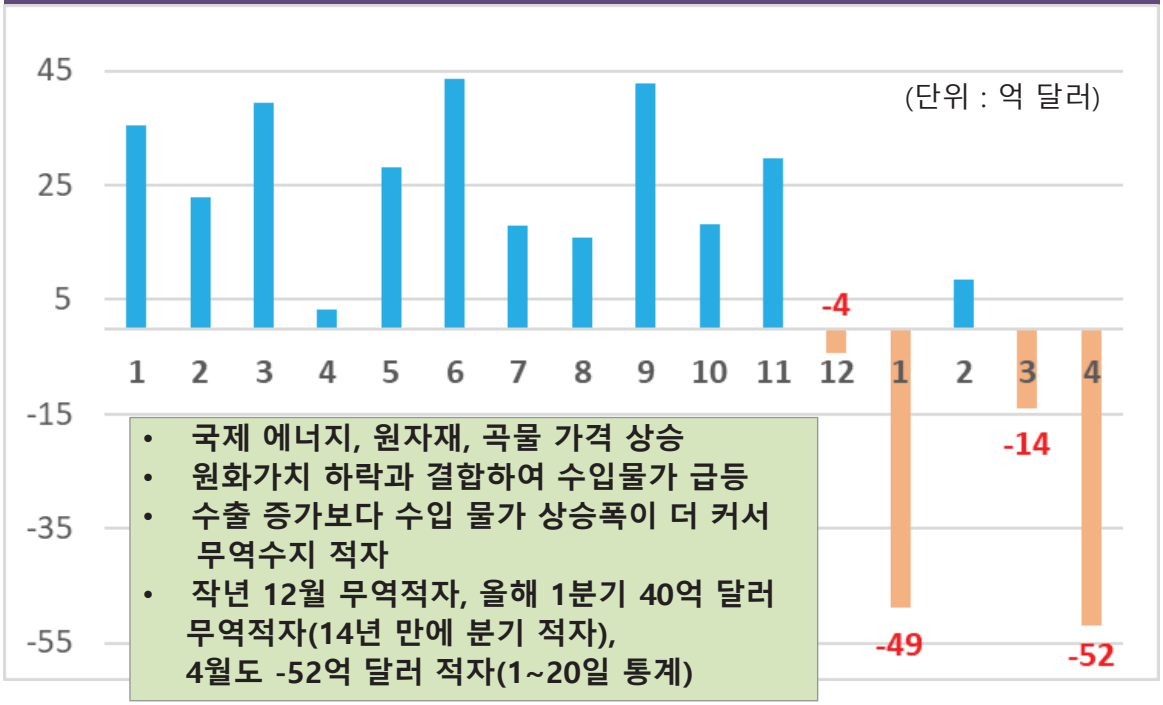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4회(작년 8, 11월, 올해 1, 4월) 금리 인상, 2019년 수준으로 회귀. 1.5%
  미국 연준의 추가 긴축에 한국도 2~3회 금리인상 가능성.
-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인상은 경기침체 초래, 그러나 치솟는 물가와 원화가치 하락 막아야 하므로 진퇴양난

원화가치 하락

- 미국 연준의 긴축으로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 약세 흐름, 원화가치는 다른 통화보다 더욱 하락.
-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 중국경제 둔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올해만 3월까지 9조 1천억원 순매도, 코스피 시총 외국인 비중 27%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등 때문
- 원화가치 추이
  (원화/달러)



무역수지 적자



- 국제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
- 원화가치 하락과 결합하여 수입물가 급등
- 수출 증가보다 수입 물가 상승폭이 더 커서 무역수지 적자
- 작년 12월 무역적자, 올해 1분기 40억 달러 무역적자(14년 만에 분기 적자), 4월도 -52억 달러 적자(1~20일 통계)

지정학적 리스크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서방 대 중/러 경제블록 형성,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종속국 동참
-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원자재 수출 제한, 지적재산권 보호중단, 외국자산 국유화 추진(러시아산 원자재 수입 불가, 교역 감소, 현지 기업 타격)
- 한국은행 금통위는 4/14 지정학적 리스크를 새로 추가, 한국 경제성장률 3% 하회 시사.
- 여기에 한반도 리스크 추가 : 문재인 정부 남북합의서 불이행, 북한 ICBM 발사, 미국 핵 항공모함 동해 진입(4년 5개월 만에 대결국면으로 전환)
- 윤석열 당선자 대북 강경기조, 박근혜 시대(국지전 발발)로 회귀 선제 타격 – 핵 무력 사용 말 폭탄.
- 세계적 신냉전과 맞물려, 한국에서 자본 이탈, 투자 감소 우려

생산활동 동향

- 한국경제 2022년 2월 기점으로 생산, 소비, 투자에서 하락세로 전환
-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설비투자 크게 감소, 건설투자 소폭 증가. 민간소비 정체, 무역수지 작년 절반수준으로 하락.

<월간 산업활동동향 추세>

(단위 : 전월비, %)

월	생산	소비	설비 투자	국내 기계수주	건설 기성	건설 수주
2021. 11	1.2	-0.7	3.9	25.0	-1.1	-4.8
2021. 12	1.3	2.2	2.1	52.0	6.0	-7.0
2022. 1	-0.3	-2.1	2.1	6.5	-0.4	21.4
2022. 2	-0.2	0.1	-5.7	-15.2	-8.5	-13.0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2022.3.31) * 국내기계수주와 건설수주는 전년동월대비

고용 동향

- 2022년 '3월 고용 동향' 에 따르면 (통계청, 전년동기대비)
-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작년 3월 대비 83.1만 명 증가하였고 고용률도 61.4%로 1.3%p 상승, 실업자는 34만 명 감소, 구직 단념자도 22만 명 감소.
  취업자 및 실업자 수로 볼 때, 코로나 침체에서 회복세
- 그러나 고용 회복세는 기저효과로 볼 수 있고 지속가능성은 더 지켜 봐야
- 우선 취업자 연령대는 60세 이상에서 45만 명, 50대와 20대에서 각 20만 명 대로 증가하였으나, 30대와 40대에서는 각 1~4만 명 증가에 그침
- 다음으로 고용의 질이 나쁜, 주 17시간 이하의 단기 일자리가 16.1만 명 (7.4%)이나 증가하여 231만 9천 명으로 최대 규모 기록(주말근무수당 없음)
- 또한 직장이 있지만 코로나와 경기둔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쉰 일시휴직자는 23.5만 명(55%)이나 늘어나 66.2만 명임

위기를 키우는 보수정권

- 한국경제의 특징
- 위기를 키우는 우 클릭 정책
- 경제 침체기 국가 역할

한국경제의 특징

- 원자재, 소재/부품/장비를 해외에서 구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구조.
- 대외적으로 수출 주도 성장(대기업), 세계경제 침체시 큰 타격.
- 내수 소비 저조, 부동산 투자로 경기 부양, 부채 주도 성장 (가계부채 눈덩이).
- 외국인 은행/주식 시장 장악, 수익성위주 부동산 대출, 주주위주 단기이윤 경영.
- 자본유출입으로 환율 불안정, 외환보유고 위해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 발행.
- 공공부문 시장화, 이윤논리 도입하여 공공성 훼손, 민간위탁, 비정규직 확대.
- 친기업 성장정책으로 자본-노동 분배 왜곡,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고착화.
-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다양한 비정규직 확산, 노동권 제약.
- 좋은 일자리 없어 자영업 포화 상태, 대부분 영세화, 저부가가치화.
- 대외종속 구조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위기 때마다 계층/부문간 격차 확대.

위기를 키우는 우 클릭 정책

- 민간 중심의 공정 혁신경제론
-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복지재원
- 민간주도형 일자리 창출, 신산업의 자발적 일자리
- 네거티브 규제완화, 복수의결권, 가업승계제도(상속세 완화)
- 부동산 공급확대, 대출규제완화, 세제완화(보유세, 거래세)

➡ 전형적인 친기업 성장 정책으로 수출/부채주도성장 올인.
감세, 긴축 재정, 노동유연화 등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경제 침체기 국가 역할

- 대전환기(보호무역, 공급 차질, 신냉전,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화 약화)
  수출과 부채로 인한 성장은 한계, 내수 확대 및 핵심 산업 자립화 필요.

-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경기 침체기에 무능.
  작은 정부/시장만능주의(민간우위, 시장 조절기능, 기술혁신이 성장동력 등)는 호황기 또는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
  그러나 침체기, 공황기에는 수요-공급의 시장법칙이 작동하지 않음,
  시장실패, 독과점의 폐해 등이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함.

- 침체기, 단기에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
  케인즈 안 – 대공황기 국가의 공공투자(수요창출)로 일자리 만들고, 소득보장, 노동3권 보장하여 교섭력 보장(노동자 자력으로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실현)
  코로나 시기 - 고용유지지원금, 전국민재난기금, 임대료 연체 가구 퇴출 금지, 자영업자 지원대출/상환연장,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나누기(소득보전) 등

- 우크라이나 전쟁, 초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시장기능 마비, 작은정부로 해결 안됨
- 기업 부도, 구조조정, 임금과 복지 후퇴, 실업 발생시 – 정부의 보호망 절실
- 시장주의 정책은 사회안전망, 공공성 후퇴로 취약계층 위기, 국가 위기 초래.

수출경제, 부채경제의 한계

- 부채주도성장 위기
- 수출주도성장 위기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공공성 약화, 양극화 위기

부채주도성장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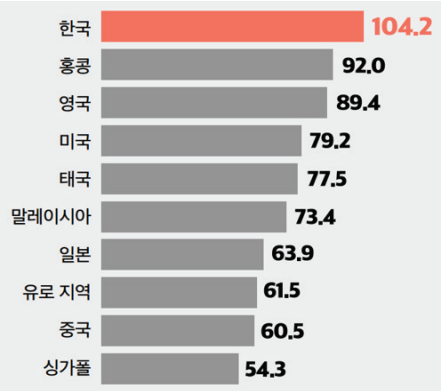
- 가계신용 : 1,862조원(2년 만에 260조원 증가), 한국은행 통계
  개인금융부채(가계신용 +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단체 대출) 2,180조

- 여기에 가계부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겨진 부채들이 대단히 많음
  - 기업대출로 분류된 자영업자 부채 약 541조원(복식부기)
  - 한국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임대보증금 약 864조원
  - 제2금융권의 가계성 법인 대출 266조원
    상가, 건물, 토지, 공장,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 대출

구분	내 용	규모	GDP대비
가계신용	가계대출 1,755조(주택담보+기타대출) + 판매신용 106조원. 한국은행 통계	1,862조	90.5%
개인금융부채	가계신용 + 소규모 개인사업자대출 +비영리단체 대출. 국제 통계	2,180조	106.1%
가계부채1	가계신용 + 개인사업자 부채 + 임대보증금	3,267조	158.8%
가계부채2	가계부채1 + 가계성 법인 대출(비주택담보대출)	3,433조	

자료 : 한국은행, 키움증권에서 재작성

부채주도성장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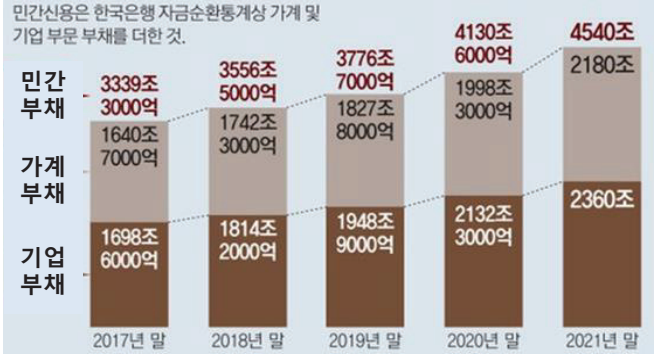


<가계부채 국가 비교>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
증가속도 세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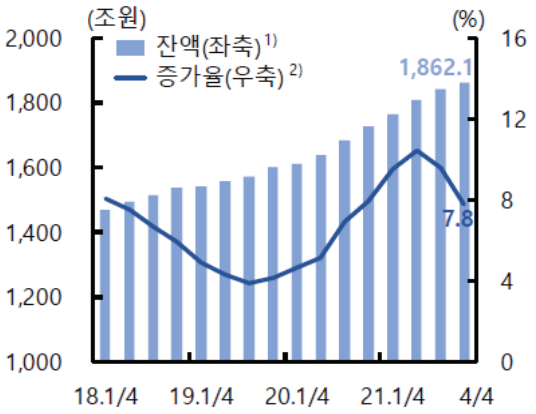
(2021년 2분기, 국제금융협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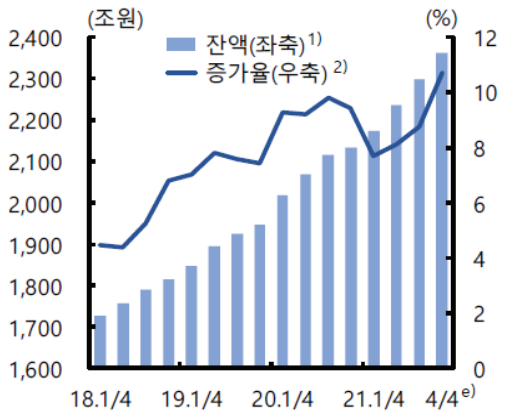


부채주도성장 위기

<가계신용 추이>



<기업신용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보고서(2022.3)

부채주도성장 위기

-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 전체 차주의 6.0%(약 123만명), 대출잔액 기준 5.0%(약 9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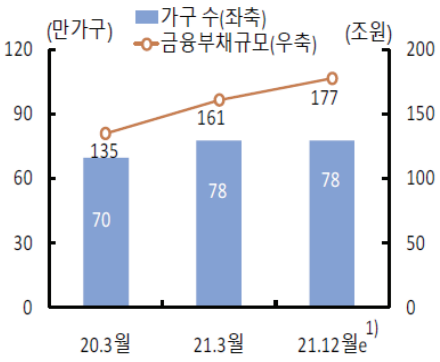
- **2030대 청년세대 가계대출 475조원, 1년 만에 35조원 증가, 이중 취약차주 비중은 6.6%**
- **자영업자 133조원 대출상환 4회 연장, 78만 가구가 적자, 금융부채 177조원.**

- **대내외 여건 악화(금리, 집값 변화)시 취약차주로 전락할 수 있는 잠재 취약차주 비중은 증가 추세, 소득 감소시 이들은 취약차주로 전락(주담대 금리 7~8%)**

* 잠재 취약차주 : 다중채무자+ 중소득/중신용 또는 2중채무자+저소득/저신용.

*** 코로나 이후 자영업 적자가구 현황**

<가구 수 및 금융부채 규모>



자료 : 한은 금융안정상황보고서(2022)

부채주도성장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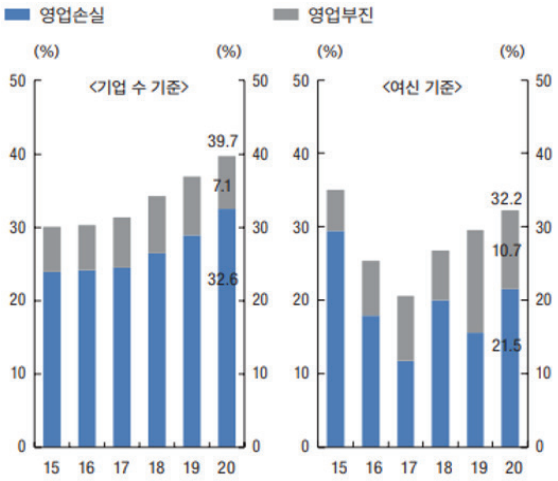
●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취약기업이 40%(2020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 1 미만 기업이, 1년 전 35.1%에서 4.6%포인트 상승, 2008년 금융위기 때(33.2%)보다 높은 수준

● 취약기업의 여신 비중은 분석대상기업(434조원)의 32.2%(140조원)로, 2017년 이후 상승세

● 영업손실 취약기업의 경우 기업 수 및 평균 여신 규모가 모두 증가, 여신 비중(21.5%)이 전년보다 6%포인트 상승.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비중 추이>



주: 1) 연도별 분석대상기업의 기업 수 및 보유 금융기관 여신 대비
자료: KIS-Value, 한국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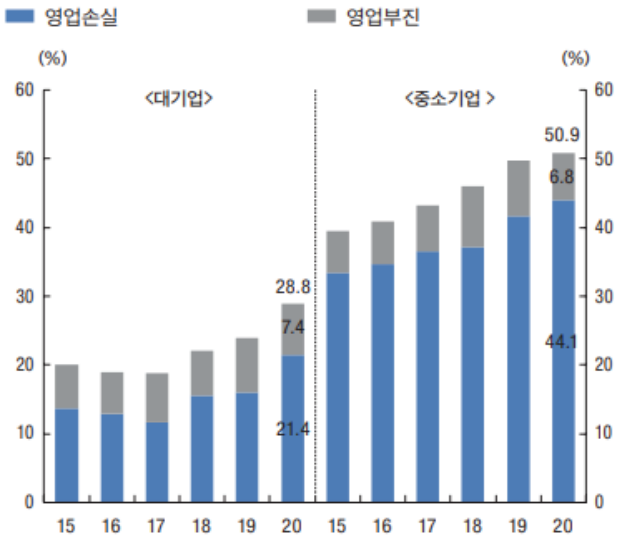
부채주도성장 위기

● 취약기업 수는 조사대상기업 중
중소기업 50.9%
영업손실 44.1%, 영업부진 6.8%
대기업은 28.8%
영업손실 21.4%, 영업부진 7.4%

● **대출이자 1%포인트 증가하면**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
약 4% 증가(한국금융연구원)

● **비금융기업 연 이자비용**
- 2020년 53.0조원(기준금리 0.5)
- 2021년 58.1조원(기준금리 0.75)
- **2022년 66.9~72.7조원 예상**
(기준금리 1.75~2.25시)

<취약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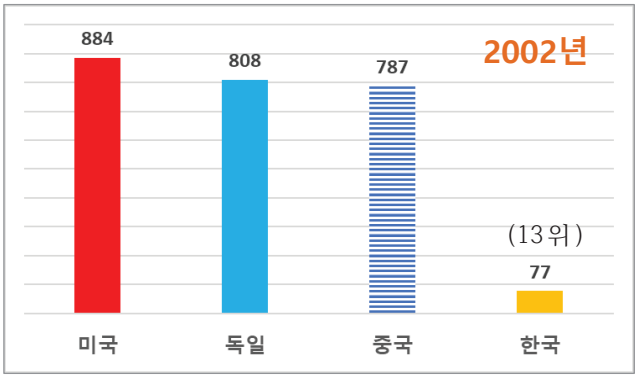
수출주도성장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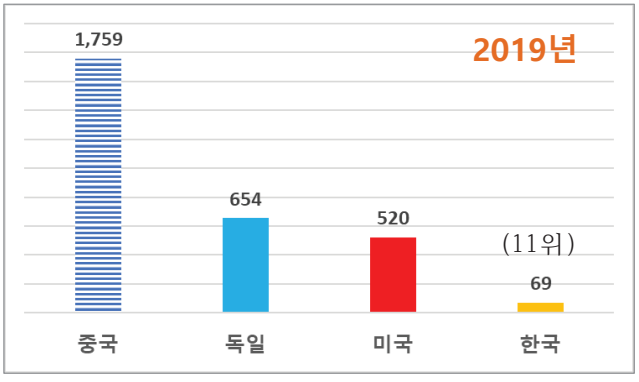
- 기업수 **0.8%인 대기업(805개)이 전체 수출액의 67% 차지**
- **제조업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84% 차지**, 이 중 대기업이 71% 점유
- **소수 재벌의 상위 13개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80% 차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선박,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석유화학, 철강제품, 섬유류, 자동차부품, 컴퓨터 등)
  : 국제분업에서 중후장대 산업에 특화

수출주도성장 위기

수출시장 세계 1위 품목 수

한국은 수출규모로 세계 6위이나 수출시장 1위인 품목수로는 세계 1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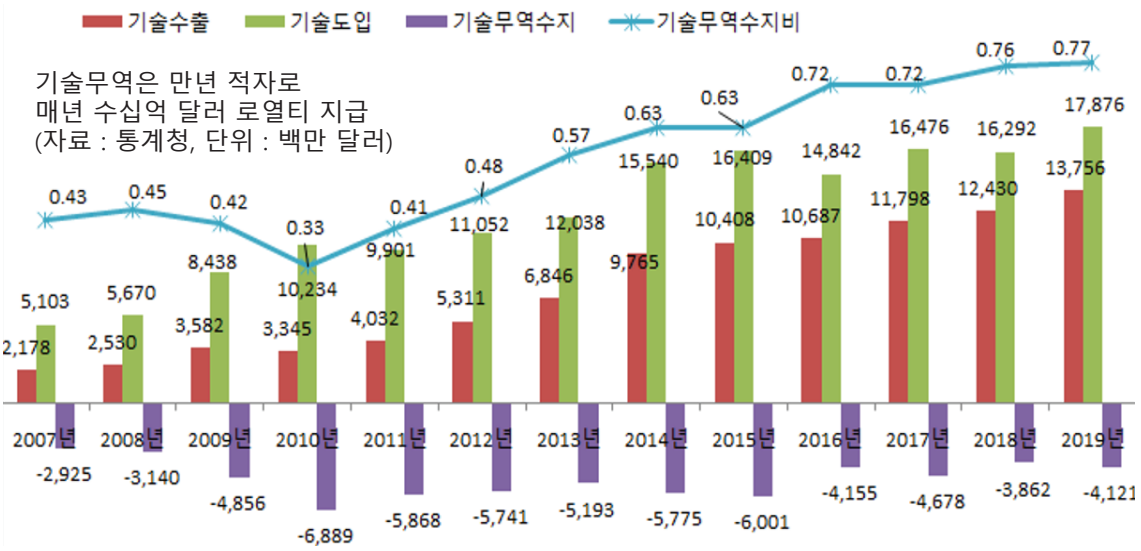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주도성장 위기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18	’ 20	’ 18	’ 20	’ 18	’ 20	’ 18	’ 20	’ 18	’ 20
기술수준(%)	76.9	80.1	76.0	80.0	87.9	87.3	94.8	95.6	100	100
기술격차(년)	3.8	3.3	3.8	3.3	1.9	2.0	0.7	0.7	0.0	0.0



수출주도성장 위기

- **수출은 반도체 외 대부분 산업에서 고전 중.**
- **반도체 위주 수출 성과는 지속 가능하지 않음**

- 반도체 성장은 미국이 부가가치 높은 설계(시스템반도체 팹리스)에 집중하면서 대만/한국 메모리 및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업구조 형성.

-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저장장치) 강자, 시스템반도체(연산장치) 도전자. 메모리반도체는 거대한 설비 투자하여 대량생산하는 구조, 대기업 적합. 팹리스(다품종 소량생산)에서 중소기업들은 성장 정체.
- 반도체에서 한국의 소부장 국산화율은 장비 20%, 소재 50%에 불과, 수출한 만큼 수입, 장치산업으로 고용창출은 저조.

- 제조업 재활성화 전략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공장 설립(바이든 반도체 패권 탈환 선언, 종속국에 회사 정보제출 요청, 투자 요청 : 삼성전자 테일러시에 19조 생산공장 투자).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무한경쟁 진행 중(수백 조 원 투자).

- 한국/대만의 반도체 메모리와 위탁생산에서 독과점 지위는 지속가능 하지 않음.

수출주도성장 위기

-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 약화
  전염병, 보호무역, 신냉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에너지, 식량, 원자재, 핵심 기술(반도체, 밧데리) 등 수출 제한. 핵심 산업은 자국생산으로 전환

- 대외의존적인 한국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의존, 요소수처럼 중국에 80% 이상 수입하는 부품소재가 1,800개임, 수출주도성장의 지속가능성 한계 봉착
  원자재 값 급등, 블록화로 교역 제약, 작년 12월 이후 무역수지 적자

- 산업구조 변화 : 중후장대산업에서 서비스경제, 플랫폼경제로 전환
  SW 개발능력, 지적재산권에서 한국은 후발 국가.

- 수출 감소를 내수 확대로 만회
  - 노동자, 자영업자의 소비 진작(고용과 소득 안정)이 해법
  - 대기업 수출 성장과 낙수효과는 허상, 수직계열화 및 간접고용 양산.
  - 고용유발계수(10억원 투입시 고용효과) : 서비스업(9.41), 제조업(4.68), 반도체(1.60)
  - 한국 제조업 위주 수출경제로 서비스업 영세화, 저부가가치화
    농축산업은 수입개방으로 값이 싼 외국산으로 대체, 농지 감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9%로 상향(상반기 4.2%)

-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 + 공급차질, 보호무역 = 지속 상승

- 부채경제로 인한 초인플레이션 막기 위해 연준 금리인상(빅스텝) 올해 6회, + 양적긴축(5월부터) 등 긴축경제 2023년까지 지속

-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 상승 제한 ➡ 투자 및 소비 축소 ➡ 생산 감소 ➡ 경기 침체

- 한국은 독립적 통화정책 불가 : 달러 체계 금융자본시장 종속

- 윤 정부 법인세 인하, 부가가치세 인하 검토 :
  역사적으로 감세정책은 기대한만큼 투자와 세수 증대로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 발생 (미국 만성적 재정적자, 부채 위기)

공공성 약화, 양극화 위기

- **경제침체 때마다 시장주의 해법**(구조조정, 인건비 등 비용절감), 자산계급에게 유리한 통화정책(제로금리, 양적완화) 등으로 공공성 약화, 양극화 심화
- **공공부문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고용/임금 유연화, 공공요금 인상, 민간위탁, 민간투자사업 확대, 공공재정 긴축운영 가능성.
- **민간기업** 구조조정, 인수합병, 임금동결, 복지 축소, 인력조정 가능성
- **취약계층 증가, 민생위기** : 신산업 규제완화로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등 불안정 노동 증가, 고용노동 감소로 실업, 영세 자영업 증가, 청년층 실업 등 민생위기
-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 96% 관세 철폐, 보조금 폐지, 검역 중단 등의 조치로 농수산물 개방, 수입 증가로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침체, 제조업은 증가 예상, **부문간 양극화 심화**

진보진영의 과제

- 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전선 구축
- 전 국민적 요구를 내걸고, 사회적 투쟁전선 확대
- 주요 요구 담론화
- 진보정당과 함께 정치개혁 사업으로 추진
- 민중공동투쟁 조직
- 이윤위주 성장 중단, 공공성/사회안전망 강화 총력투쟁

경제 침체기 총연맹의 대응 방향

- **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전선 구축**
  - 물가상승 이상의 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
  - 노동 개악 저지, 불황기 노동자 생존권 보호(고용, 노동조건, 안전)
  - 특고, 플랫폼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교섭력) 보장

- **전 국민적 요구를 내걸고, 사회적 투쟁전선 확대**
  - **수출 만능에서 주요 산업 자립화** : 식량축산 자립, 소재부품장비 자립 (중소기업 특화), 신재생에너지 확충, CPTPP(환태평양) 재고
  - **교육, 의료, 주거, 돌봄 국가책임, 기간산업 국영화**
  - **확장적 재정정책** : 취약계층 자금지원 및 부채상환 유예,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대, 부문/계층/지역 간 격차 해소
  - **국익 우선 중립 외교** : 미국서방-중러 대결에서 한쪽 블록 가담 중단
    원자재, 에너지, 부품소재 중국, 러시아와 교역 필요(서방과 조건 다름)
    삼성전자 시안공장 30조원 투자, 전 세계 낸드플래시 10% 생산.
    달러체제 의존 탈피, 통화주권 확보, 외평채 등 국가부채 줄여야.
    인도, 터키, 이스라엘 러시아 경제제재 불참, 사우디 페트로 위안화

경제 침체기 총연맹의 대응 방향

- **주요 요구 담론화**
  진보진영 차원의 거시경제 대안 제시
  교육, 선전, 토론회 등 공론화 사업 강화

- **진보정당과 함께 정치개혁 사업으로 추진**
  입법 추진, 국회 및 대정부 요구와 실천
  조합원 참여하는 실천 프로그램 조직

- **민중공동투쟁 조직**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등 연대 강화

- **'이윤위주 성장 중단, 공공성/사회안전망 강화' 총력투쟁**
  내부 교육, 선전, 사회 공론화, 연대 확보 등 사전사업 이후 투쟁

지정토론 01

중앙은행 정책이라는 맥락

임 수 강

정책자문위원

○ 두 발제문(“미 연준은 ‘고금리’로 ‘고물가’를 잡을 수 없다-최근 스태그플레이션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국내 경제 진단과 전망”)의 공통 키워드는 금리, 환율, 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세계 화폐, 양적 완화, 부채 등으로 요약 가능. 이러한 키워드들은 모두 중앙은행 정책과 이러저러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은행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발제문의 관련 부분에 대해 토론

〈중앙은행 정책의 비중립성〉

○ 중앙은행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견해

- 첫째, 중앙은행의 정책이 계급 중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기초(objective technical grounds)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공정하게 수립된다는 견해. 불편부당한 최적의 중앙은행 정책이 존재한다는 가정.
- 둘째, 중앙은행의 정책이 이해관계의 각축장에서 결정된다는 견해. 구체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관계, 산업과 금융의 관계,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국가의 위치 등을 반영하여 중앙은행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
- 셋째, 중앙은행 정책이 기본적으로 자본-노동 관계를 재생산하고 자산가 계층의 자산 보호라는 독점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견해

○ 위 세 가지 견해는 각각 주류, 포스트-케인지언,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친화성.

- 중앙은행의 정책 수립과정에 대해 대립적인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은 중앙은행의 정책이 계급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
- 주류 견해에 대한 비판가들은 중앙은행 정책이 항상 정치의 중심을 차지했으며, 따라서 중앙은행이 정치에서 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은 허상)
- 또한 비판가들은 중앙은행의 정책은 정치적 힘 관계, 경제의 제도와 진화에 의존한다고 주장(중앙은행 정책은 자본-노동 관계나 분배구조에 영향; 예컨대 자본-노동관계에 영향을 준 1980년대 초 미국 연준의 고금리 정책, 분배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최근의 양적 완화)

〈자산가 계층에 친화적인 주류의 이른바 ‘새 합의’ 모형〉

○ 최근의 중앙은행 정책 수립에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새 합의’ 거시 모형

- 1970년대 이전 주류 경제학의 ‘합의’된 거시경제 분석의 틀은 케인지언과 화폐주의(통화주의)를 혼합한 ‘신고전파 종합’
-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기를 거치면서 화폐주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1980년대 초반에는 화폐량 관리 위주의 화폐주의 정책이 실험되기도 했으나 이내 포기됨(화폐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와 아울러 고금리 정책의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났기 때문.

이론적으로는 화폐주의 주장들이 현실에서 설명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판명).

- 이후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으로 화폐량 조절이 이니라 이자율 조절이라는 것을 이론에 도입하려는 시도들. 이는 거시경제의 '새 합의' 모형 또는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이라는 틀로 연결
- '새 합의' 모형은 큰 틀에서 보면 화폐주의 모형에서 그다지 벗어난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화폐주의의 핵심 주장인 화폐와 실물의 이분성, 일정한 '준칙'(목표 인플레리션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 명목 이자율 조정)에 따른 화폐정책 등을 수용하기 때문

○ 199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글로벌 수준에서 통화정책의 모범 규준으로 자리 잡는데, '새 합의' 모형은 이에 대한 이론적 토대 제공

-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이외의 목표,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 공평한 분배, 금융배제자 지원 등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장기에는 화폐 정책이 인플레이션이나 가격 수준에만 영향을 줄 뿐, 일자리나 실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
-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목표를 포기하고 화폐가치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상품 가격이 안정되면 자동적으로 금융안정이 보장된다는 이른바 '슈와츠 가설')

○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자산 계층 시각에서 보면 성공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서 중요한 기능을 했기 때문

- 인플레이션 타겟팅 논리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은 상품 가격이 안정적이기만 하다면 화폐 공급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음.
-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세계시장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국면이 나타나면서 중앙은행들은 화폐량 공급을 늘릴 수 있었음(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말하는 이른바 '대 완화(Great Moderation)' 시기)

*** 브래너(Brenner R.)는 1990년대 이후 상품 가격 안정 국면이 나타난 이유로, 첫째,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지면서 생산성 증가만큼 실질임금을 인상시키지 못함에 따라 가격 상승 압력이 낮아졌다는 점, 둘째, 주요 선진국들이 과잉설비, 과잉생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 인도, 동아시아 국가 등이 세계시장에 새롭게 참가하면서 설비와 생산의 과잉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제시

〈화폐자본(moneyed capital)의 독자적인 순환〉

○ 기업준비금, 축적기금, 감가상각기금, 가계의 저축은 금융시장에 대출 가능한 '화폐자본(moneyed capital)'의 형태로 집적되어 금융부문 속의 유통에만 머무를 수 있음.

- 화폐자본이 금융부문에만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은 케인즈(Keynes J. M.)가 제시한 산업적 유통과 구분되는 금융적 유통 개념, 마르크스(Marx K.)가 제시한 현실자본의 축적과 구분되는 화폐자본의 독자적인 축적 개념 등을 통해 인식 가능
- 이러한 개념들이 중요한 이유는 증가한 화폐량이 실물자본의 재생산을 매개하지 않고 금융시장 안에서만 머물면서, 상품 가격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은 채,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때문
- 물론 주류 이론에는 이러한 개념 구분이 없음

○ 금융기관은 재생산을 위한 대출이나 자산 거래를 위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두 가지 형태의 대출은 그 성격이 전혀 다름.

- 전자는 재생산이 확장되는 범위에 의해 제한을 받지만, 후자는 이론적으로는 그 한계가 없음(나중에 금융위기로 그 한계가 드러나지만).
- 예컨대, 금융기관이 토지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주체에게 대출을 해줄 경우, 땅값이나 주식값이 상승하면 담보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이리하여 후자는 전자에 비해 훨씬 넓은 범위로 확장 가능.

○ 스태그플레이션 논의에 주는 함의

- 미국은 달러 발행을 늘리면 시뇨리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달러 발행을 늘리려는 유인에 노출. 그러나 달러 발행에는 한계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계는 세계시장의 상품 가격이 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
- 1990년대 이후 상품 가격의 안정으로 미국은 달러 발행을 늘릴 수 있었고, 이리하여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이것은 미국과 주변국의 자산가 계층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
- 최근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이 달러 발행을 더 늘려가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졌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품 가격의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인가, 지속적인 현상인가 하는 점
- 세계시장 상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현재와 같은 국제적인 달러 자금 순환 체계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

〈 1980년대 이후 중앙은행 정책 변화〉

○ 1980년대 이후 중앙은행 정책이 자산 가격 유지, 부양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 그 중심에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등이 자리 잡고 있음.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흐름이 나타남.

○ 중앙은행 정책 목표의 축소 경향

- 중앙은행 목표를 인플레이션 관리라는 단일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경제 발전, 고용, 불평등 완화를 위해 수행하던 중앙은행의 역할은 포기
- 정부의 은행으로서 기능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시(중앙은행이 정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를 인수하거나 정부에 대출을 해주는 것을 대체로 회피). 대신 은행의 은행으로 기능하는 중앙은행 역할은 강화
- 주류의 중앙은행 이론가들은 중앙은행의 힘이 크지 않다는 사실 강조(포스트-케인지언 가운데도 중앙은행이 단지 시장의 의사결정을 수용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 존재)

○ 선별적인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기피

- 중앙은행의 금융기관 지원 정책은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 직접적인 지원은 선별적인 지원을, 그리고 간접적인 지원은 일률적, 무차별적 지원을 나타냄.
- 신자유주의 시기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대출 대상이나, 목적, 규모에 따라 차등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당연시
- 투기를 막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거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금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별 금융이 필수적. 그러나 선별 금융은 자산가 계층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방향
-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낮추고 자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혜 대상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음.

*** 가계부채 문제를 평가할 때, 가계부채가 발생한 원인별, 대상별 구분 분석이 매우 중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자산 구입 목적이며 생계비 목적은 매우 작은 부분. 그 결과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이 차지(이는 미국과 다른 점인데, 미국은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을 저소득층이 차지).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은 선별적이어야 함.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그 절대 규모가 크다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 가계부채를 독점한다는 데서 발생. 이런 면에서 가계부채 위기론,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경감론, 하우스푸어론 등은 경계해야 함.

○ 자산 가격 유지와 부양을 위한 여러 논리

- 저금리: 자산가 계층이 저금리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는 대출의 대부분이 증권화한 현실 반영.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은 하락
- 거품은 터트리지 않고 터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린스펀 독트린'
- 대마불사; 파산 금융기관 구제 범위의 무한정 확대
- 최후의 마켓 메이커(Market Maker of Last Resort ; MMLR) 논리에 기반한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양적완화)

〈노동조합은 무얼 요구해야 하는가〉

○ 중앙은행 정책은 자본-노동관계나 분배 구조, 자산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활 조건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 노동조합이 중앙은행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이유

*** "통화정책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라면 기술 관료에게 맡겨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로 인해 커다란 분배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실제로 중앙은행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스티글리츠 J.)"

○ 중앙은행 목표의 확대

- 현재의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는 좁은 범위에 묶여 있는데, 중앙은행 목표의 확대를 요구해야
- 중앙은행의 목표에 경제발전 지원이나 일자리 확대를 추가
- 중앙은행 목표에 자산 가격 안정을 추가(현행 한국은행법은 "금융안정에 유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를 자산 가격 안정으로 명백히 할 필요성)
- 금융배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추가

*** 중앙은행의 목표에 자산가격 안정을 담은 영국 공공정책연구소(IPPR)의 제안

○ 선별 금융의 확대

- 현재도 한국은행은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같은 선별 금융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이의 대폭 확대 필요성
- 예컨대 투기적인 담보대출은 제한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주택마련 자금은 지원하는 방향

○ 시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중앙은행 독립

- 화폐정책을 정부의 일반 경제정책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인 중앙은행에 맡긴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위반
- 독립적인 중앙은행만이 인플레이션과 더 잘 싸울 것이라는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것(스티글리츠 J.)
-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체계가 사회의 더 넓은 부분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

- 한국은행법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산업자본가와 금융자본가 대표만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당연히 노동자 대표도 들어가야(금융통화위원회 개편 요구)
- 이와 아울러 중앙은행이 시장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 모색(우리나라 은행들의 대부분은 외국자본이 장악. 외국자본이 장악한 은행들에 의해 중앙은행의 정책이 크게 좌우되는 것이 현실)

*** 중앙은행 문제의 권위자인 블라인더(Alan S. Blinder)는 중앙은행과 금융시장의 부적절한 소통은 위험한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독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

지정토론 03

경제전망

이 진 숙

인천본부 정책국장

1. 경제상황 개요

- 2022년 세계 및 한국경제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점차 회복되어 가는 국면이지만 그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옴. 기술혁신이 정체되어 성장률 전망이 낮은데 2008~09년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민간(가계, 기업) 및 정부 부문에 거대한 부채가 축적되었는데 부채상황은 불확실성이 매우 큼.
- 최근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우려되었던 인플레이션 위험이 실질화되고 있음. 지난 3월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선진국들의 경우 미국 7,9%, 유로존 5,9%, 영국 6.2%,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이었던 일본도 1%. 신흥국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인도 61%, 러시아 9.2%, 브라질 10.5%, 아르헨티나 52%, 터키 54% 등.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의 저물가를 깨고 4% 수준에 이름.
-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공급측 요인. 코로나로 야기된 공급망 경색(공장 폐쇄 등 공급사슬 파괴/교란, 물류 병목현상 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최근에는 중국의 코로나19 통제 봉쇄정책으로 인한 공급측 위험요인이 더욱 강화되어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은 이중삼중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처함.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분석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보임.
- 그런 점에서 발제문 “미 연준은 고금리로 고물가 잡을 수 없다”에서 제시하는 미국의 달러패권의 약화와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은 현재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자본주의 양상의 일부분에 대한 묘사는 될 수 있지만 현재 스태크플레이션의 배경으로까지 설명하기에는 정합성이 낮아 보임.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중국이 미국 헤게모니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에서의 쟁점도 상당하지만 이와 별개로 그렇다면 노동운동/사회운동의 입장에서 중국이 미국 패권 하의 현재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의 쟁점 또한 존재함.
- 또한 이 연장에서 발제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미국이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으킨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공모가 있어야 가능.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원인/행위/효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텐데(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에 미국의 책임이 상당함은 분명한 사실) 위 주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도 그다지 정합하지 않아 보임.
- 주로 공급측에서 원인이 있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에 따라 미국 연준, 유럽중앙은행 등 각국 정부(중앙은행)의 대응책이 준비되고 있음. 중앙은행들의 일차적 목표는 물가상승을 통제하는 것.
- 미국의 경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었고 올해 연말까지 1.9%로 인상한다는 계획. 이에 따라 한국도 현재 기준금리 1.5%에서 올해 내 여러 차례 금리인상이 예고되고 있는데, 목표했던 2% 수준을 넘어 3%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금리 인상 결정 회의는 모두 5번).

2.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사점

- 현재 경제상황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대불황 당시의 상황과 비견되고 있음. 현재의 인플

레이션 사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예측이 있음. 그러나 현재 인플레이션 원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쉽지 않고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만큼 1970년대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당시 사태 전개는 ▶1973년 3~4%대 물가상승 ▶1974년 1차 오일쇼크 영향으로 물가인상 12% ▶1977년 5%로 물가상승 진정 ▶1979년 2차 오일쇼크 겪으며 물가상승률 15%대 진입.
- 1차 오일쇼크 전후 미 연준은 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에 소극적 입장 견지. 당시 번스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임금억제 등 가격통제 등 미시정책으로 대응. 1971년 닉슨 행정부 임금인상 상한 5.5% 이내로 설정하는 정책 도입[1]. 이후 가파른 물가상승이 지속되자 1973년부터 재할인 금리인상을 하였으나 실질금리는 오히려 하락.
- 1차 오일쇼크가 끝난 1975년 이후 연준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세율인하, 지출확대 등 확장적 재정기조로 전환. 물가가 일시적으로 안정화되었다가 2차 오일쇼크로 다시 치솟기 시작.
- 1979년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초고금리인상 정책 시행. 취임 당시 11.2%였던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14%대로 인상하고 1981년에는 20%대로 인상. 1983년이 되어서야 물가가 3%대로 떨어지고 볼커가 연준 의장에서 퇴임하던 1987년에 4% 유지.
- 이러한 볼커의 초고금리 정책은 다수 기업들의 파산, 실업률의 급등(6%→10%), 시차를 둔 반복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 등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불러옴.
- 요컨대 당시 상황은 초고강도의 금리인상이 경제불황을 불러오고 근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멈추고 유가를 낮춘 것은 금리인상이 아닌 경제불황.
- 통화정책은 케인즈주의 관점에서 총수요를 조절하는 정책.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생산에 비해 소비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를 인상하여 대출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욕구를 감퇴시킨다는 것.
- 그러나 1970년대와 현재 상황은 모두 수요 측이 아닌 공급 측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 또한 자본의 수익성이 높거나 상승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도 금리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의 연착륙은 성공하기 어렵고 더 강한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밖에 없음.
- 한편, 코로나19 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일정 수준의 재정정책의 확장기조는 유지될 수 밖에 없음. 이런 차원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현재 상황에서 대대적인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대안적 통화정책 혹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어떠한가?
- 이 정책기조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 부문(에너지, 농업 등)에 대한 통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고(오히려 국가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 이 부분이 물가상승 압

1) 이러한 가격통제 정책은 영국도 유사. 1차 오일쇼크 전후 영국은 고용증대를 위한 공공투자 확대, 소비세 인하 등 다소간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공공부문 가격인상 억제, 임대로 상한제, 임금인상 억제 등 가격통제 정책 실시.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고 물가가 20%대 중반까기 치솟음. 1979년 대처 수상 집권 후 가격통제 정책을 폐지하고 중앙은행이 가파른 금리인상 조치를 취하고 나서 8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물가가 안정화 추세로 접어듦.

박의 핵심 요인), 공공투자가 민간의 경기 활성화까지 자극할 수 있으려면 실로 막대한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인데 공공인프라가 극도로 지체된 국가가 아니고서야 택하기 어려운 선택지.

3.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노동운동의 대응과 변화

-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는 국가와 자본뿐 아니라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여러 의미에서 분기점이 되었던 시기.
- 전후 황금기에 만들어진 주요 선진국들의 노사관계 체계, 노동운동 전략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뒤이은 신자유주의 정책 전면화 시기를 거치며 대체로 붕괴/변형. 중앙집권적 교섭구조의 분권화, 노조 조직률 하락 등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
- [영국] 1970년대까지 영국 노조는 국가의 법적 개입 없이 노조의 힘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는 '자발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기업별, 분권화된 교섭에 집중. 1979년 노조조직률 55.4%, 전체 노동자의 85%가 집단적 임금결정. 1979년부터 1997년까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보수당의 5차례에 이르는 노사관계 관련 개혁 입법화(사용자 재량권 확대를 형사상 책임이 아닌 민사상 책임만 도입,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요건 축소 등). 1979년 '불만의 겨울' 투쟁을 거치며 경제위기에 대한 노조책임론이 사회적으로 전면화.
- [이탈리아] 1975년 노조의 힘의 우위 속에 임금물가연동제 도입(임금을 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산업별 정액인상). 1980년대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3개 노총 중 북부 고임금 제조업 노조가 다수 소속된 CGIL의 분열. 인플레이션 통제를 시도했으나 리라화 위기와 이탈리아 유럽통화제도 탈퇴 이후 1992년 물가연동제 폐지, 이후 지속적인 경제악화 상황.
- [스웨덴] 수출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생산성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조정, 기업이나 산업의 지불능력이 아니라 수행하는 일에 기초해 임금을 받는다는 임금연대에 기초한 임금교섭 모델(렌-마이드너 모델). 정부가 단체교섭을 적극 보장. 1980년대를 거치며 사업장에서의 추가 임금교섭이 확대되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 또한 유럽단일시장 논의가 개시되면서 사용자들의 노사관계 체계에 대한 불만이 강화되고 금속노조의 높은 수익성을 거두는 엔지리어닝 부분에서 분권화된 교섭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앙교섭 약화. 이후 지속적으로 임금교섭 분권화, 유연화, 개별화.
-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 전통적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에 무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거시경제 조치보다 신자유주의 노동개혁 같은 미시적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집중하게 됨. 이러한 노동개혁이 객관적으로 실효성이 있었는지, 이런 노동개혁이 노조의 힘을 약화시켰다고는 해도 실제로 경제위기를 방어하거나 실업을 억제하는 데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쟁점.
-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경제위기 시기 노동운동의 대응전략의 현재적 시사점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문제.

4.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은?

구분	5인 미만				300인 이상			
	상용직		일용직		상용직		일용직	
	근로시간	임금	근로시간	임금	근로시간	임금	근로시간	임금
2020.01	160.3	2,583,342	84.4	1,087,583	160.2	7,346,173	123.9	2,161,596
2020.04	156.7	2,331,146	83.7	1,107,366	160.3	4,891,874	124.2	2,024,721
2021.12	177.3	2,598,704	85.2	1,130,209	173.7	7,363,727	130.2	2,363,459
2022.01	157.8	2,755,036	85.2	1,176,073	160	9,473,981	128	2,563,120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임금의 회복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장 규모, 종사상 지위를 망라하여 대략 2021년 12월을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임금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됨(2022년 1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일부 산업에서 특별상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 이후 발표되는 자료를 통해 추세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음).
- 일반적으로 경제위기 시기를 지나면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됨. 사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플랫폼, 프리랜서 등), 돌봄 등의 취약노동자 집단에서 코로나로 인한 고용감소, 일거리 감소, 소득감소가 심각했고 여전히 회복이 더딘 상황을 감안하면 임금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 올해는 물가인상을 감안한 임금인상이 필요하며, 특히나 코로나 시기 동안 임금인상이 상당히 억제되어 있었던 만큼 이를 감안한 임금인상 투쟁이 예상됨.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시도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세심한 투쟁목표와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임.

○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개입 구상

-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까지 사태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최소2~3년은 진행될 것이고 장기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된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
-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 대응책의 뚜렷한 묘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총노동 차원의 특히 경제위기의 피해가 집중되는 미조직, 저임금, 취약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노동운동의 대응이 매우 중요함.
- 한편, 1970년대 영국의 경우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노동운동의 책임론은 임금인상 요구를 비롯한 노조의 경제적 투쟁이 실제 얼마나 영향을 끼쳤나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끼침.
- 민주노총이 경제위기 원인과 진행양상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단발성, 단기간의 요구만이 아닌 정부 거시경제정책을 개입하는 가운데 임금과 고용전략, 교섭 및 투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전략적 방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국가 거시경제정책에 개입하려던 1970년대 이탈리아, 스웨덴 등의 시도)

○ 저임금,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의 권리 우선 대응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인상(자영업, 영세사업장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대책 함께 제시)
- 코로나 고용위기 회복이 지체된 부문의 경제위기 영향 분석 및 정부 지원대책 지속
- 코로나 시기 지체된 임금인상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업 부문의 비용이 하청부문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요구

○ 경제위기 상황에 걸맞는 민주노총의 요구 정식화

- 1997년 IMF 시기 민주노총 투쟁과 요구의 교훈
- 경제위기 시기 반복되는 노동개악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 아닌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에 걸맞는 연대임금, 연대고용 요구와 전략
-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 요구와 전략
- 위기가 집중되는 산업부문에 대한 산업정책 요구

지정토론 04

경제상황 진단과 과제

고 미 경

민주노총 기획실장

1. 세계경제의 불안정

1) 미국의 경제상황

○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2008~2021)

년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평균
성장률(%)	-0.3	-2.8	2.5	1.6	2.3	2.2	2.3	2.9	1.6	2.4	2.9	2.2	-3.5	5.7	2.1

〈참고〉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년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평균
성장률(%)	9.6	9.2	10.3	9.5	7.9	7.8	7.3	6.9	6.7	6.9	6.6	6.1	2.3	8.0	7.7

○ 미국경제 상황

- 2021년 미국은 4분기 6.9%를 포함하여 연 5.7%의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
- 소비자물가는 2021년 11월 6.8% 이후 2022년 3월 8.5%로 40여년만에 최고 수준 기록
- 미국의 3월 실업률은 3.6%로 역사상 최저 수준이며 평균임금은 5.6% 상승
- 미국 연준은 3월 금리를 0.25% 인상한데 이어 5, 6월 연속해서 빅스텝(0.5%) 가능성 시사
-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급속한 경기하강 현실화, 2022년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1% 미만 예상
-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전망을 기존 4.4%에서 3.6%로. 미국은 4.0%에서 3.7%로 하향조정.

2) 미국경제상황의 특징

- 2020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후 1년동안의 짧은 경기상승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 발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회복 지연, 누적된 과잉유동성과 제로금리의 부작용과 한계 노정
- 현재의 경제불안정은 미국이 2008년 이후 약화되는 패권유지를 위해 중국과의 무역전쟁,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는 등 정치군사적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
- 미국의 신냉전추구로 인한 공급망의 교란, 에너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금리인상과 긴축만으로 연착륙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불안정 상황
- 향후 미국경제예측과 관련 낙관론과 비관론이 병존. 골드만삭스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 과열 진정, 가계수지의 균형 회복, 임금인상의 제한성등으로 2

년내 경기침체 가능성을 35%로 예측. 래리서머스 전 재무장관등은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4%초과(현재7.9%), 실업률 4%미만(현재 3.6%)인 상황에서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80%로 예측.

-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은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고물가의 지속과 불가피한 금리인상, 이로 인한 경기하강이 필연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스태그플레이션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
- 제한적이지만 중국 경제정책의 자주성과 주도적 무역체제구축 역량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경제위기를 타국에 전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당면 경제위기는 신냉전체제와 상호작용으로 위기의 심화, 장기화와 결국 달러체제의 약화, 붕괴로 인한 체제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

2. 한국경제 상황

1) 경제성장률 추이

년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평균
성장률(%)	3.0	0.8	6.8	3.7	2.4	3.2	3.2	2.8	2.9	3.2	2.7	2.0	-1.0	4.0	2.8

- 한국경제는 지난 10여년간 2~3%대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잠재성장률 또한 2%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
- IMF는 4월 우크라이나전쟁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전망을 3.0%에서 2.5%로, 물가상승률은 3.1%에서 4.0%로 조정

2) 고용동향

- 통계청 발표 2022년 3월 고용동향은 고용률 67.8%(OECD기준, 전년대비 2.1%상승), 실업률 3.0%(전년대비 1.3%하락), 취업자수 2,775만 4천명(전년대비 83만 1천명 증가)
- 고용의 질 측면에서 발제문에 지적했듯이 60세 이상이 45만명으로 취업자 증가분의 50%이상을 차지, 30·40대의 고용증가는 미미함. 또한 17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가 231만명으로 최대규모. 단시간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전일제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FTE고용률)은 2010년 66.5%, 2019년 62.0%에서 2020년 58.6%, 2021년 58.8%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시직, 단시간노동중심의 고용이 확산되고 있음.

3) 양극화 심화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2021년 상장기업(연결 595개사 기준)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299조 1,181억원으로(전년 대비 19.8% 증가), 영업이익은 183조 9,668억원

(73.6% 증가), 순이익은 156조 5,693억원(160.6% 증가)으로 큰 폭으로 증가. 영업이익률 8.0%, 순이익률 6.8%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51조 6,339억원(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 SK하이닉스는 7조 3,977억원(147.6% 증가), 포스코는 6조 8,351억원(284.4% 증가), 현대차는 4조 2,843억원(178.9% 증가), LG전자는 3조 8,638억원(1.1% 감소) 기록
-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21년 9월말 현재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비중이 대기업은 23.2, 중소기업은 50.9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에 비해 10%이상 증가한 수치임.

4) 경제위기의 가능성과 현실성

- 세계경제상황은 인플레이션의 심화와 장기화, 원자재와 부품공급의 불안정 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
- 3.24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2180조, 2360조원으로 GDP대비 220%를 넘어섰으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여동안 증가폭이 24.6%로 매우 빠른 속도.
- 향후 1~2년동안 2% 내외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이 4% 증가하고 가계의 이자부담은 18조원이 늘어나게 됨. 가계대출 연체율이 정부의 금융지원과 완화조치 연장에 힘입어 하락세에 있으나,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와 2030 청년층 등 취약차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가중되고있음.
- 수출주도, 내수취약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에너지·식량에 대한 극단적 대외의존성, 대미 정치군사적 종속성에 따른 경제정책 자율성 부재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불안정과 침체가 한국경제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여기에 더해 북중, 북미 정치군사적 대결로 인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이 한국경제 위기 심화요인으로 작용
- 경제위기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조건에서 신정부의 재벌중심 경제정책, 공공성 약화와 시장주의 성장만능정책, 부동산 경기부양정책 등은 위기의 증폭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3.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의 과제

1) 경제위기 대응 관점과 방향

- 경제위기나 이로인한 지배체제의 위기가 도래할 때 정권과 자본의 전형적인 대응은 노동자.민중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저항을 억압하는 것임. 경제는 살려놓고 봐야한다는 논리로‘경제위기(체제위기) 수습’이데올로기를 전파.
- ‘고통분담론’,‘양보와 상생’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민중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계급협조와 타협, 투항을 겁박함. 위기극복방안으로 포장하면서, 착취와 수탈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자본의 수법. (IMF의 경험과 교훈)
- 민주노총은 위기를 불러온 근본원인(구조적 위기)을 진단하고 (경제)체제 전환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대응의 핵심. 내용적으로는 국가책임(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통제하는 방향, 민영화에서 국유화(사회화)의 방향, 경제주권 확립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함.
- 프레임싸움을 전면적으로 진행하여 진보논리의 우위를 점해야하며, 총노동차원의 투쟁전선을 구축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

2) 차별없는 노동권-질좋은 일자리 보장 요구의 사회화

-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조건에서 생활 유지를 위한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사업장·산별단위의 임금인상투쟁과 전국민적 최저임금인상투쟁을 통한 생존권 보장
- 양극화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5인미만 사업장, 단시간노동자, 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등 노동권 ‘배제’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투쟁 조직.
- 기간제·파견제의 폐지를 통해 차별과 불평등의 대명사인 비정규직 고용관행 청산, 유통물류 등 플랫폼산업에서 노동조건 보장, 돌봄노동의 국가책임 쟁점화

3) 경제위기에 대한 단기.중장기 의제 전면화

- ‘공적자금으로 민생 구제, 수탈로 배불린 재벌기업이익 환수로 민중구제’전면화,
-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문제 해결. 자영업자, 청년층, 실업자·비정규직 부채 동결, 상환 유예
- 투기자본, 해외자본의 은행 주식소유 제한, 은행 국유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 위기극복을 위한 재벌기업 (한시적) 법인세 부과, 공적 자금 투입 기간산업 국유화 등

4) 민중연대, 사회적 연대의 강화

- 의료, 주택, 돌봄, 교육, 에너지교통 영역에서 시장화 반대, 공공성 보장 대응사업 강화
-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등 블록경제 가입 반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추경편성등 연대전선 강화
-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경제정의-기후정의 시민연대전선 구축 강화
- 민생위기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쟁점화

5) 경제주권 실현

-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대러, 대북 경제제재 불참, 경제블럭 불가담
- 한미일군사동맹 편입 반대, 한미군사훈련 중단, 남북간 대화 재개..
- 자립적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준비. 에너지·식량 자급화를 위한 중장기적 노력